

디지털 심화의 새로운 질서수립 동향

박태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책기획팀 책임

1. 머리말

현 시대 디지털 기술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으며, 최근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사례가 증명하듯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생각됐던 사유의 영역과(Homo Sapiens) 창작의 영역(Homo Creatura)까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디지털 혁신의 응집체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얘기(NLP, Natural Language Process)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 간 언어 장벽을 깨고(Multiple Language Translation), 감탄할 만한 예술작품을 창조(Text-to-Image)해 내기도 하며, 실존하지 않는 현실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영상화(Text-to-Video)할 수도 있다. 디지털(또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혁신 도구가 됐다. 이러한 점에서 알파벳(Alphabet)의 CEO인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가 디지털 기술을 현대판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의 불에 비견했던 것도 과도한 비유적 표현은 아닐 것이다.

기본적으로 불이 생성과 파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것과 같이, 디지털 기술 또한 명과 암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인류에 풍요와 번영의 막대한 혜택을 주는 한편, 오남용될 경우 인류가 감수하게 될 사회적 피해 또한 치명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말, 오픈AI(Open AI) CEO인 샘 올트먼(Samuel H. Altman)의 급작스런 해임과 복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¹⁾ 최근 디지털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업계와 학계를 막론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이 현 상황이다. 이를테면, 디지털 부머(Boomer, 유행·성황 등을 일컫는 Boom에서 파생)라 일컬어지는 개발론자들은, 인류가 불을 통제하며 인류번영을 이루어 냈듯 디지털 신기술은 인류도약의 기회가 될 것을 강조하며 좀 더 발전된 기술개발과 새로운 혁신 창출을 더욱 가속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 두머(Doomer, 파멸·종말을 일컫는 Doom에서 파생)는 디지털 신기술이 이미 인간의 능력과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으로 인류의 파멸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규제와 안전장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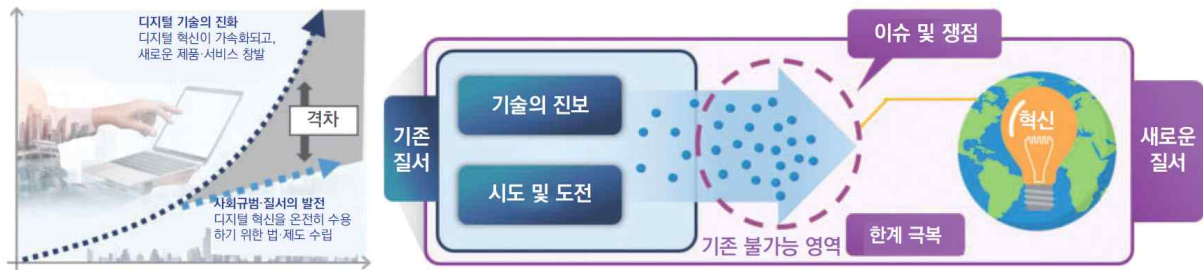
그러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 진영의 주장은 기술혁신과 안전통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일 뿐이지, 양 진영 모두의 논의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또는 디지털과 공존) 하는 새로운 사회발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양측 모두가 디지털 심화에 맞는 안전과 규범, 질서에 대한 필요성 또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¹⁾ 2023년 11월 17일, 오픈AI 내부에서 인공지능 개발 가속화를 주장하던 샘 올트먼이 인공지능의 안전과 통제를 우려했던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됐으나, 투자자 요구, 내부반발 등으로 불과 5일 후인 11월 22일 다시 오픈AI CEO로 복귀함. 이때 샘 올트먼의 해임·복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표면화됐음.

보인다. 이미 글로벌 주요국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와 규범정립을 통한 사회안전과 번영으로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차원에서 업계와 학계 등에서의 논쟁을 중재·조정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2024년 9월 뉴욕에서 예정돼 있는 '미래 정상회의(The Summit of the Futures 2024)'에선 글로벌 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정책적인 권고사항이자, 디지털 질서의 공유 원칙인 GDC(Global Digital Compact, 글로벌 디지털 협약)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²⁾이다. 글로벌 논의가 가속화될 수록 국가 간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동향을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최근 디지털 심화에 따른 현대 질서와 규범 등의 접근·적용에 상당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선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제언·시사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IITP (2023)

[그림 1] 디지털 기술혁신 가속화와 사회규범·질서의 발전

2. 글로벌 논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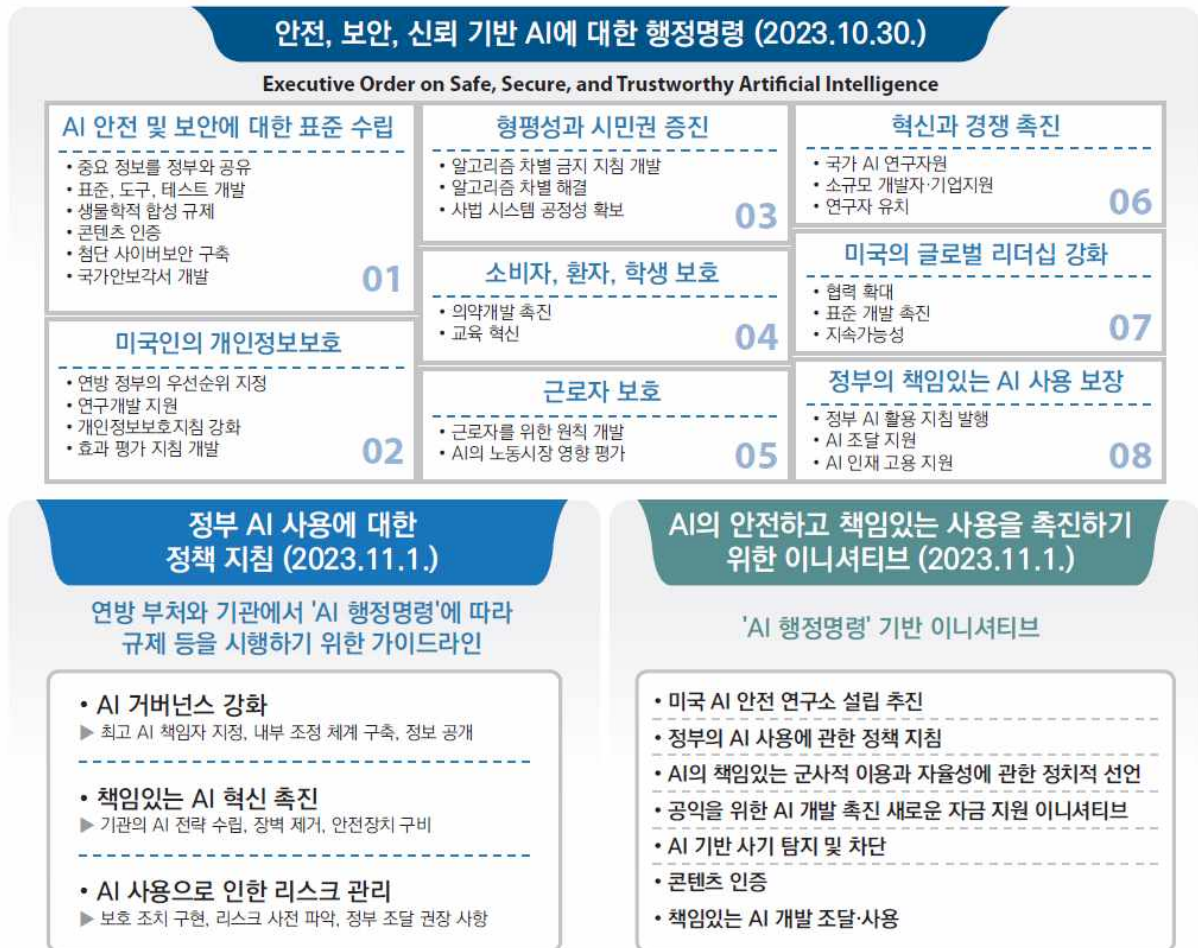
디지털 심화 세상의 새로운 질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적 합의다. 이는 국가·기업·시민 등 다양한 주체 간 원만하고 호혜적인 공존을 위해 상호조정·중재에 필요한 원칙이자 가치판단의 기준점 역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으로 현행 질서체계에서 다양한 갈등·충돌 등의 이슈와 새로운 쟁점이 불거지고 있기에, 급속한 기술발전예 대응하는 질서정립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국은 디지털 관련 선언·헌장 등을 발표하는가 하면, 새로운 법·제도 등을 수립함으로써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이 사회에 온전히 수용되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1 미국

미국에는 오픈AI, 구글(Google), 메타(Meta),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처럼 역량 있는 글로벌 유수의 디지털 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선도국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강도 높은 행정명령 등을 발표하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²⁾ UN은 2021년 9월에 디지털 협력의 공동의제(Our Common Agenda)를 발표하며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A Global Digital Compact – an Open, Free, and Secure Digital Future for All 보고서를 공개하며 협약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했으며, 2024년 4월 5일에는 GDC보고서의 초안(Zero Draft)이 UN 회원국들에 공유될 예정이다.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2023년 10월 30일 발표한 '안전·보안·신뢰 기반의 AI 행정명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이다.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 관리예산국)은 연이어 동년 11월 1일 행정명령에 대한 첫 번째 정책지침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발표했다.



출처: IITP(2023)

[그림 2]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 및 정책 지침

2024년 3월 28일, 미 행정부는 동 행정명령의 첫 번째 정책지침 사항이 150일 기간 동안 조치가 모두 완료됐음을 발표하고, 추가적인 정책지침 사항을 제시하며 전략의 연속선상에서 질서를 정비하는 노력을 추진하는 중이다. 두 번째 정책지침 사항 역시 앞서 첫 번째 정책지침과 같이 인공지능 거버넌스 강화, 책임 있는 인공지능 혁신 촉진,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라는 동일한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미 행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구현할 것을 주문하고, CAIO(Chief AI Officer, 최고 AI책임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인공지능 거버넌스 위원회설립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인재 확보 프로그램(The National AI Talent Surge) 등을 통해 전문인재 발굴·양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개방성을 위한 기술 공유·협업을 독려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했다. 미 행정부는 또한, 인공지능 안전성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강조하며 리

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은 2022년 10월 4일 발표된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인공지능 시스템, ②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 ③ 데이터 프라이버시, ④ 인공지능 사용 안내 및 결과물의 설명, ⑤ 언제든지 사람이 직접 통제 가능이라는 5가지 원칙을 세워 향후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해설서(From Principles to Practice)를 함께 배포하며 원칙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의 권리와 원칙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으며, 행정부는 실질적 원칙의 이행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2 EU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단일 시장으로 2021년 기준 GDP 14조 5,000억 유로를 기록한 명실상부 세계적 규모의 선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상황이 미국 빅테크 주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EU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유지·고착화되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EU 회원국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이면 더욱 그렇다. 이에 EU는 강력한 법·제도, 규제적 수단 등을 통해 자신들의 디지털 질서체계를 보완·강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EU는 2021년 3월 9일, 유럽의 디지털 전환 비전과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2030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를 발표했다. 이는 EU가 그리는 디지털 기반의 미래 청사진과 함께 디지털 원칙의 수립계획을 담은 것이다. 해당 발표 이후, 디지털 원칙선언 이니셔티브(Declaration of Digital Principles Initiative)의 주도하에 시민 공개의견 수렴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³⁾ 각 원칙들이 구체화됐다. 이러한 원칙은 2022년 12월 15일 'EU의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문(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이 공개되고,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공식화됐다.

동 선언문은 EU의 명분을 담은 전문(Preamble) 12개 항과, 개별 권리와 원칙들에 대한 원리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본문(Chapter) 6장 24개 항으로 구성됐다. 개별 원칙들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약속(Commitment) 내용까지 함께 언급하며 그 구체성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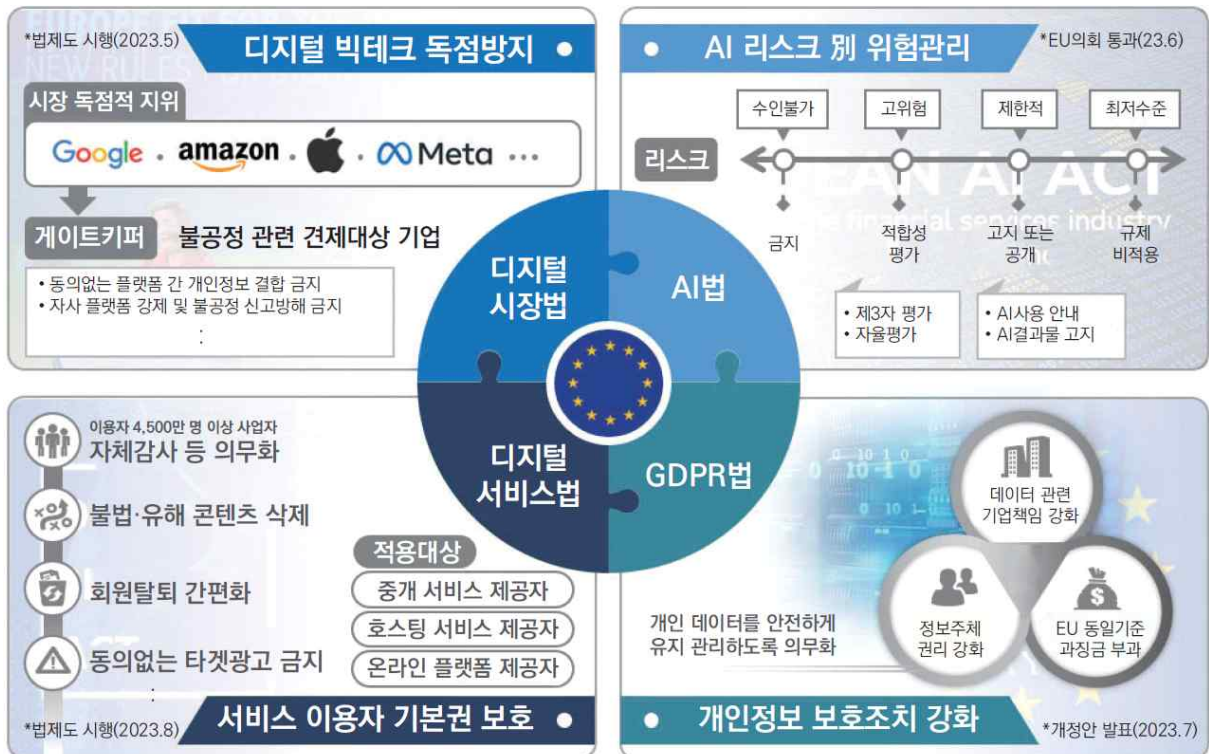
아울러, EU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일부 빅테크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이 흘러가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공정한 경쟁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시장의 입법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등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2021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던 EU의 AI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되며 법적 규제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EU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 디지털 원칙선언 이니셔티브는 2021년 5월 9일부터 주요한 디지털 원칙들을 공개하고 약 5개월 간 시민들에게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고위급 패널행사 개최(2021.6), △시민사회 심층 워크숍(2021.9), △지방정부 의견수렴(2021.7~10), △아동·교사 의견수렴(2021.3~8), △기타 이해관계자 인터뷰(2021.10~11)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원칙을 수립했음.

- EU의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문 주요 원칙 정리
 - 1장
인간중심 디지털 전환을 표방하며, 디지털에서도 온전한 기본권을 보장(제1항)
 - 2장
연대와 포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디지털 연결성 보장과 디지털 교육·디지털 근로환경·온라인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 어떠한 격차와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제2항~제7항)
 - 3장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안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누구든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이 마련돼야 함을 언급(제8항~제11항)
 - 4장
공공의 디지털 공간 참여에 대한 원칙. 민주주의에 입각한 기본권 보장을 명시(제12항~제15항)
 - 5장
안전과 보안, 디지털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 디지털 환경에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특히 개인 프라이버시, 데이터 등이 보호돼야 함.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조항들을 명시(제16항~제22항)
 - 6장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항들을 명시(제23항 ~제24항)

강력한 법·제도, 규제적 수단 등을 동원해 디지털 질서정립의 선구자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는 EU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IITP(2023)

[그림 3] EU의 디지털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2.3 영국

영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2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앨런튜링 연구소와 딥마인드 등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췄다. 2020년 1월 31일에는 브렉시트(Brexit)를 통해 실질적으로 EU를 탈퇴하며, 현재 영국은 자신만의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영국의 입장은 '브렉시트의 이점(2023)' 보고서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선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환경 속 장시간이 소요되는 EU의 의사결정 방식은 영국의 대응을 지연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규제의 자유'와 '주권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영국은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에 적합하게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More agile and lighter touch) 영국 고유의 방식으로 질서체계를 갖춰 나가며, 글로벌 디지털 허브국가(Global tech hub)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영국의 행보가 2023년 11월 1일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다. 이 자리에선 세계 최초로 전 세계 29개국 정상 및 고위 관계자, 글로벌 기업의 대표급 인사들이 한데 모여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기고, 인류공영의 중장기적인 이행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들은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기술이 오남용되는 상황들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피해 또한 일국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위협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회의는 블레츨리 선언을 통해 각국이 초국가·범국가적인 협력·대응의 초석 마련⁴⁾을 이끌어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영국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노선을 채택해 신속한 질서정립과 함께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3월 28일 발표된 친혁신 AI규제 프레임워크(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에서 책임있는 혁신을 도모하고, 명확한 규제원칙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포괄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10.26. 최종승인)'이 시행됐으며,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공정한 경쟁저해 우려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과 경쟁, 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 2024. 3. 27. 최종검토)'도 최종 왕실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독자적인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질서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 한국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선도국 중 하나로, 초거대 인공지능과 5G 전국망(2024년 예정)을 구축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우리는 또한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기술집약적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 낸 저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을

4)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동성명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설계와 개발, △혁신과 기회의 포용적 활용, △잠재적 위험의 검토, △고도화된 인공지능 오용과 통제한계의 심각성, △초국가적 협력과 공동대응, △모든 주체에 대한 안전 책임성, △첨단 인공지능 개발의 투명성·책임성, △인공지능위험에 대한 법적 필요성, △개방·포용의 글로벌 대화지속 등에 합의했음.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전문에 담아내었으며, 본문에서 총 6개장과 28개의 조항을 발표⁵⁾하며 국가차원을 넘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려는 포부와 국가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2024년 1월 30일 디지털 권리장전의 대국민 이해증진을 돕고자 동 헌장이 수립된 배경과 조문의 의미, 다양한 사례제시와 쟁점들에 대해 다룬 해설서를 공개했으며, 부처 합동으로 '(가칭)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며 실행력 확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영국에 이어 차기 인공지능 안전 미니 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2024년 5월 예정)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와 규범정립의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3. 맺음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9월에는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이에,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가속화해 새로운 디지털 혁신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에 모범사례를 공유해 나감으로서 범국가적인 디지털 질서정립 대응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특히, 선도적인 질서정립 노력을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반영하도록 해, 실질적인 질서 이행까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부터 선도적으로”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국내를 중심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원칙들을 반영하고, 실제 발생하는 쟁점 해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법·제도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위한 정책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의 대응방향(친혁신적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혁신과 규제가 조화를 이뤄, 새로운 혁신이 법·제도적인 규제로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혁신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모두와 함께, 꾸준히”

아울러, 디지털 질서정립의 성공여부는 많은 국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쟁점 발굴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상이한 질서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는 '디지털 신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갈등해결과 조정애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새로운 혁신을 사회가 지속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살아 숨 쉬는 질서가 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으로 △제1장 기본원칙(5개 조항),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보장(6개 조항), △제3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5개 조항), △제4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5개 조항), △제5장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4개 조항), △제6장 인류 후생의 증진(3개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다수 협력자와 연대해”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는 일부(또는 소수) 강대국 주도로 디지털 신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견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 국가에 의해 질서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기본원칙과 지침들이 마련된 만큼, 디지털 신질서의 논의 초기부터 다른 국가와의 적극적인 연대·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질서의 원리와 원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마련하며 질서 정립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는 단순히 선언적인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려고 할 때 온전히 동작하는 것이다. 인간과 디지털이 공존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디지털은 풍요와 번영의 길을 비추는 햇불이 될 수도, 파괴와 파멸의 견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1] IITP, ICT SPOT ISSUE(2023-12호), 디지털 심화의 새로운 질서와 규범 (2023. 12. 31.)
- [2] IITP, 디지털 해외정책 트렌드 2023-12호 (2023. 11. 30.)
- [3] The White House, FACT SHEET: Vice President Harris Announces OMB Policy to Advance Governance, Innovation, and Risk Management in Federal Agencie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3. 28.)
- [4] EU, AI Act Implementation: Timelines & Next steps (2024. 2. 28.)
- [5] Gov.UK, The Benefits of Brexit: How the UK is taking advantage of leaving the EU. (2022. 1. 4.)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디지털 심화 쟁점 해결에 본격 돌입한다! (2024. 1. 30.)

※ 출처: TTA 저널 제212호